

## 대한민국 운명의 날... '윤 대통령 탄핵안' 내일 표결

‘노무현·박근혜’ 이어 사상 세번째 민주 ‘김건희 특검’ 재표결도 추진 ‘반대’ 국힘 의원 참석 유도 ‘전략’ 지역 시민단체 대규모 상경 집회

현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대한민국 운명의 날’이 7일로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 단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자, ‘김건희 특검’ 재표결을 같은 날 추진해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는 역대 세 번째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2016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추진됐다. 두 사람 모두 국회에선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200명



광주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이 5일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거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의원 151명(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되는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과반 의석인 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때 아예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는데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그 (탄핵안 처리) 시점에 김건희 특검도 재의결을 하면 국민의힘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7시 본회의의 개의를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 측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본회의에 보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 시한은 8일 새벽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시점(5일 0시50분께)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여야 간 수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했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엔 친한계(친한동흔계)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찬성표를 던질지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선 ‘비상계엄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 군부대 관련 지휘자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탄핵표결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광주지역 8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시국대성회 추진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추진위는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500~600여명의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버스 20여대를 대절할 상태다. 이와 함께 오후 7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가질 예정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는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추진위는 보고 있다.

2면에 계속  
서울-김선옥 기자 정성아·윤준명 기자

## 국수본부장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전 수사”

“의지 없었다면 배당했겠다”  
“김용현 긴급 출국금지 조치”

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중수 경찰청 국기수사본부장은 5일 오

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절차에 따라, 당연히 수사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우 본부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나”고 물었다.

우 본부장은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당연히 수사한다” 등의 답을 내놓았다. 그러자 윤 의원은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며 따졌다.

결국 우 본부장은 “(수사할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 했겠냐”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청장도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로 거론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수사할 의지가 있나”고 질의했다.

우 본부장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청은 전남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죄 고발 2건을 접수하고, 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우 본부장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국수본)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이날 오전 면직됐다.

앞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우 본부장을 향해 “김용현 전 장관 도망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출국금지 조치 할 수 있도록 당장 전화하라”며 “그래야 수사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옥 기자

수출,  
FTA의  
모든것

# 전남 FTA 통상진흥센터

수출애로 상담 이곳에 물어보세요!

컨설팅

수출, 품목분류,  
원산지증명 관련 지원

교육

수출·FTA 단계별 교육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교육

인증지원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상담문의 061-288-3872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